

● 特別寄稿

한국 도서관의 실상과 문제점

고 광재
("마당" 기자)

29만명당 공공도서관 하나

"세계각국에 … 종략 … 도서관 혹 서적관 등을 설진(設賓)하고 … 종략… 희귀한 서적과 신발명한 저술 편찬 등을 광포(廣佈) 혼야 개명(開明) 상에 일층 진보되도록 주의 혼는 것인디, 아한(我韓)은 우금(于今) 까지 일개 도서관도 설립치 못됨을 유감히 넘었더니 근일에 유지 신사(有志紳士)들이 발기하고 도서관을 병설 훌터인디 …하랴…."

이상은 광무 10년(1906년) 2월 12일 치 "황성 신문"이 '한국 도서관' 이란 제하(題下)에 보도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도서관인 '대한 도서관'에 관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근대 도서관 운동은 근대 국가로서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계몽해야 할 절박한 시대적 필요에서 태동한 것이었다.

도서관이란 명칭이 정식으로 채택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대한 도서관'에서부터이며 그 이전까지는 대체로 원(院), 각(閣), 관(館), 전(殿), 고(庫), 실(室), 관(觀) 등의 어미가 어떠한 명사에 접미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고려의 수서원(修書院), 보문각(寶文閣), 이조 시대의 집현전(集賢殿), 대축관(大畜觀)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애국 계몽과 민중 교육의 이념에서 출발한 도서관 운동도 그 80년 남짓한 역사 속에서 숱한 왜곡과 굴절을 강요 받아 왔다. 경술 국치 이후 36년 동안은 일제의 교활한 식민 통치에 휘말려 민족혼 말살을 위한 자료 수집의 청구로 그

역할이 전락하였었으며, 8·15 해방 이후에는 연이은 좌·우익의 대립과 6·25의 피해로 도서관은 일반의 인식 속에서 까마득히 멀어져 갔다.

뒤늦게나마 60년대에 들어서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결연된 채 당위적인 명분에만 그쳤을 뿐이었고, 79년에 ‘행정 개혁 위원회’의 견의로 전면적인 도서관 진흥책이 마련될 조짐이 엿보였으나 이마저도 10·26과 5·17의 혼란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1981년 4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에는 2개의 국립 도서관(국립 중앙 도서관, 국회 도서관)을 포함하여 1백20개의 공공 도서관, 2백22개의 대학 도서관, 3천 1백84개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1백91개의 특수 도서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한국 도서관 통계” 1981, 이하 모든 통계는 이것을 기준으로 함).

흔히 한 나라의 공공 도서관의 규모와 숫자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 도서관은 우리 나라의 경우, 집계된 1백20개의 도서관에 총열람석 3만 8천 50석, 장서량 총 1백74만 1천 7백50권으로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작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비례로 환산해서 1개 도서관당 인구가 약 29만명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말레이지아의 6만 9천 명, 폴란드의 1천 2백71명,

[표 1] 주요국 공공도서관 대비표(1980년, “유네스코 통계 연감”)

내용 국명	인구수 (천명)	공공도 서관수	도서관당 인구수	장서수 (천권)	1인당 장서수
한국	34,707	120	289,255	1,741	0.05
미국	218,659	8,601	25,352	387,565	1.77
일본	114,898	1,609	71,409	58,786	0.51
말레이지아	12,960	188	68,936	880	0.06
덴마크	5,104	1,351	3,777	32,713	6.40
영국	8,278	13,596	4,105	122,824	2.20
스웨덴	55,822	2,295	3,606	34,615	4.18
폴란드	35,010	27,139	1,271	81,870	2.33
멕시코	66,944	1,084	61,756	2,770	0.04
태국	45,100	527	85,578	586	0.01

멕시코의 6만 1천 7백 56명에 비해 약 5배에서 20배로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장서량에 있어서도 덴마크의 6백 40권에 비하면 무려 12만 8천 분의 1밖에 안되는 천문학적인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의 연간 총예산은 50억 1천 4백 1십만 7천 원으로 1인당 약 1백 44.2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1년 도서 구입비가 1백만 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약 75퍼센트에 해당하는 89개소이며, 심지어는 1년간 도서 구입 예산조차도 전혀 책정되지 않은 곳도 23개소나 된다. 문화성 산하에 도서관청으로까지 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문화성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소비하는 덴마크의 공공 도서관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공공 도서관에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은 바로 정부의 지원이 미온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2. 마비되어 가는 도서관의 기능

서울 시내 모 시립 도서관에 들러 막 도서관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났다.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아침 일찍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수생과 고등학생으로 도서관은 만원이어서 열람표를 교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열람표는 남은 좌석이 있을 때만 교부되거든요. 약 세 시간 이상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입실이 허가돼 입관료 1백 원을 내고 부랴부랴 들어가 필요한 책을 찾아 보았으나 3~4만 권이나 된다는 책들 중에 내게 필요한 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공공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다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한 사

(표 2) 한국 도서관 현황(1981년 “한국 도서관 통계”)

현황 관종별	도서관수	열람석수	연간 증가 책수	장서수	1년간 도서구 입비(천 원)
국립중앙도서관	1	824	39,756	833,133	81,976
국회 도서관	1	204	51,556	510,027	143,300
공공 도서관	120	38,050	179,834	1,741,750	515,741
대학 도서관	222	91,885	820,717	11,025,261	4,433,024
학교 도서관	3,184	319,619	-	11,912,181	2,069,896
특수 도서관	191	4,598	182,522	2,544,607	1,261,305
합계	3,719	455,180	1,274,385	28,566,939	8,505,242

실일 것이다.

현재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은 6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그 이전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하여 개관 직후엔 이미 열람석은 짜 들어차고 만다. 대학의 시험기간 중이나 중·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중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심해, 시립 도서관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내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새벽 4~5시부터 일찌감치 차례를 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 세 시간을 기다렸다면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판 시립 도서관 창문 곁에 자리잡은 어느 재수생은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주: 부지러한 새가 떡이를 차지 한다는 뜻)이라는 영문을 열심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우리 나라 공공 도서관에 연간 증가되는 책은 총 17만 9천 8백34권으로 1도서관당 매년 3천원짜리 책 1천 5백여 권씩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책은 하루에만도 80여종 가량, 공공 도서관은 그 중에서 겨우 4권 정도 구입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우기 연 1백만원 이하의 도서 구입비를 지출하는 89개 공공 도서관의 경우, 이들 도서관의 총 도서 구입비는 2천 9백34만원, 평균 1도서관당 33만원 꼴이다. 따라서 이들 89개 도서관은 1년에 3천원짜리 책 1백10권, 한 달에 새로 들여 오는 책이 10권도 채 안되는 셈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진정한 도서관의 기능인 자료 보존이나 정보 제공의 기능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애초에 빈약한 장서로 시작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개관할 때는 여기저기서 기증받은 도서라도 있어 볼 만한 책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그 뒤 계속해서 책을 사들일 돈이 없는 이들 공공 도서관은 개관 당시 펼쳐 놓은 책 보따리로 계속 연명해 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 도서관이 점점 구색을 갖춰 세월과 함께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낙후되기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공공 도서관은 하루 1만여원 어치의 빵으로 29만명의 정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극빈자 중의 상극빈자가 아닐 수 없다.

3. 경성 제대 20년과 서울대 30년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떠맡고 나갈 동량(棟梁)을 기른다고 하는 대학에서도 사정은 이와 다를 바 없다.

새벽 5시 소위 명문이라 불리우는 서울대 도서관, 아직 완전히 동이 트려면

조금 이른 시각이지만 문앞에는 벌써 몇 명의 학생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도서관 수위는 아직 출근도 하지 않고 그나마 숙직 수위도 자기 소관이 아니어서인지 아무 기척도 없다. 시간이 흘러 개관 시간 즈음이면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줄은 벌써 도서관 앞에서 휘어지고 꺾여져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룬다.

이윽고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정복을 입은 수위가 나타나 도서관 현관문을 연다(7시가 개관 시간이지만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많을 때는 미리 개관한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우르르 먼저 자리 잡으려고 마치 모이 찾는 새떼처럼 도서관 안으로 몰려든다. 더우기 옆의 빈자리에 책을 얹어 놓음으로써, 서로 약속된 친구의 자리까지 확보해 버린다. 따라서 도서관 좌석은 개관하자마자 꽉 들어차버리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울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대학이 이 지경인데, 졸업 정원제 실시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

4년제 대학 설치령은 각 대학 도서관에 대해 학생 1인당 책 30권, 학생 5인당 1개 좌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4월 1일 현재 학생 1인당 평균 책수는 19.2권과 1좌석당 학생수는 6.8명으로 문교부에서 정한 시설 규정에 훨씬 밀돌고 있다. 자세한 통계가 없어 속단하기 힘드나 졸업 정원제 실시 이후 정원의 1백30퍼센트를 초과 모집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의 수치는 각 14.77권(1인당 평균 책수), 8.84명(1좌석당 학생수)으로 늘어나게 된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엔 기숙사 제도와 도서관 제도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등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항상 널찍한 열람실과 꽉 들어찬 서가가 보장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지치면 바로 근처에 있는 기숙사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면 그 만인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 자료는 년간 6만2천여 종. 이 가운데 최소한 10퍼센트는 확보해야 도서관으로서의 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서울대의 경우 '82년 2억5천만원을 들여 5천9백10종을 구입, 그런대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세대는 1천5백67종, 고려대는 1천1백12종으로 뚜 떨어지고 있으며, 그 밖의 대학은 대체로 3백~5백 종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대가 해방 후 30년간 수집한 도서수가 과거 일제하의 경성 제대가 20년간

수집한 도서수와 맞먹는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대학 도서관의 비참한 신세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대학 도서관 이외의 각급 중·고등학교 도서관 실태는 더욱 한심한데 학생 1인당 장서수는 평균 약 2권에 불과한 반면, 1좌석당 학생수는 약 13명이 넘고 연간 1인당 예산액은 5백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명색뿐인 도서관이라도 가지지 못한 학교가 절반을 넘는다.

외국의 경우 대학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도 도서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필요한 모든 학습은 거의 과제물로 처리된다. 프랑스의 예풀 노르말이나 영국의 이튼 스쿨 같은 예가 그것인데,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책을 한아름씩 안고 기숙사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비능률적인 교육 제도와 결합되어 도시관이 우리나라처럼 천대받는 곳도 아마 없을 것이다.

4. 교수 대접 받는 외국의 대학 사서

도서관의 자격 사서 부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도서관이 일반에게 제 구실을 하려면 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 책이 어떤 책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 많아도 그것이 올바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1백20개 공공 도서관 중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55곳데, 그 중 정사서가 일하고 있는 곳은 21곳데 뿐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이 공부방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를 마치기만 하면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사서는 그 규준이 엄격하다. 대학 도서관의 전문사서는 최소한 일반 교수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 받는다. 즉 도서관학에 관하여 전공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정식으로 전문사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대우에 있어서도 일반 교수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대학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 우리나라에 귀국한 후 정식 대학교 수로 채용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역으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사서가 외국의 도서관 전문사서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국제적인 모임이나 행사 때에 외국의 유명 대학 교수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어엿이 대접받는게 바로 전문사서들이

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사서 교사의 총원은 시급하다. 현재 사서 교사의 총원은 1천 8백52명인데 중·고등학교 도서관 수는 3천 1백84개이니 1도서관당 한명의 사서 교사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1천 3백32개의 학교 도서관은 사서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계산이나나온다. 사서 교사가 이렇게 부족하게 된 원인을 어느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38세)는 이렇게 말한다.

“사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별도의 사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일반 교사보다 한가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사서 교사에게는 주임 제도가 없읍니다. 따라서 일단 사서 교사로 보직이 정해지면 주임 교사로 승진할 기회가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주임 교사로 승진이 안되니 물론 교장이나 교감 승진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남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면서도 기회는 더 제한되는 사서 교사 직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하겠느냐는 얘기다. 다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는 숨은 교사들에 의하여 도서관 사서 교사직은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 제도적으로도 소외된 도서관 업무

우리 나라의 도서관 제도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통일적인 도서관 협조 체제의 결여이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 체제는 행정 관청에 따라 2원화되어 있다.

국립 중앙 도서관, 각급 대학, 학교 도서관은 문교부 관할이며 직접적으로는 시·도 교육 위원회와 관계한다. 직원은 행정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돼있다.

한편 공공 도서관은 주로 내무부에 소속해 있으며, 각 행정 구역별로 시·군·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공립 공공 도서관은 해당 지방행정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사립 공공 도서관은 해당 지방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는다. 직원은 내무부 소속으로 된다.

그런데 미국·일본·덴마크·서독 등의 선진국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 도서관 청, 도서관 국, 도서관 정책 심의 위원회 등 도서관과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교육의 중추 기관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자료 정리, 정보 제공, 도서 대출 등 기본적인 도서관 업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회 단체가 맡고 있는 노인 학교, 주부 교실, 육아 교육 등까지도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교 정책은 학교 교육 우선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사회 교육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사회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자연 소홀히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업무가 문교부 사회 교육과(課) 성인 교육계(係)의 한 도서관 담당자에 의하여 전담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언가 도서관 업무에 있어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6. 개정이 시급한 ‘도서관 법’

도서관의 전반적인 행정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법’이 제정된지 올해로써 21년이 된다. 21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1963년에 제정된 현행 ‘도서관 법’은 정부와 일반의 도서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한번의 개정도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관계자는 현행 도서관 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현행 법률은 지방 공공 도서관의 설치를 권장 사항으로 하고 있지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다. 지방 공공 도서관의 의무적인 설치는 지방 문화 육성과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사서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3. 도서관 중의 도서관, 즉 전체 도서관을 통괄하고 선도해 나가는 도서관으로서의 국립 중앙 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지극히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
4. 정보 수집, 자료 제공 이외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 교육이나 사회 봉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5. 도서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전국적인 도서관 자체의 내부 협력망이나 전담 부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6. 학교 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법 자체의 강제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7. 도서관 가운데서도 가장 전문적이고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학 도서관이 일반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범주로 처리되고 있다.

이어 현재 신축 중인 국립 중앙 도서관에 대해 덧붙여 말한다.

“지금 강남구 반포동에 새로운 국립 중앙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연건평 1만3천71평에 지하2층, 지상6층으로 5천4백 석의 열람석을 갖춰 현 남산의 국립 중앙 도서관의 6.6배의 크기지요. 물론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읍니다.

현재 건설중인 도서관의 신축 예산은 평당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당 7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교사(校舍)를 지을 때의 신축 예산에 준한 것으로 열람실 외에 장서실 자료실 등의 주요 시설과 필름, 녹음 테프, 컴퓨터 단말 장치 등 특수 자료를 보관할 장소를 갖춰야 하는 도서관 시설에는 어림없는 액수입니다.”

외국의 경우 최소한 평당 예산이 1백30만 원은 책정되어야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서관을 학교 교실 정도로 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다.

7. 경제 성장 속에서 신음하는 도서관

지난 60년대 이래 우리는 지나치게 경제 성장만을 추구해 온 감이 있다. ‘경제성=시장 가치’라는 물가치적인 경제성의 추구는 한국 사회의 각 부문이 파행적으로 발전해 오도록 한 주된 요인이며, 그 여파는 오늘날 한국 도서관을 빈사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경제적인 것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것이다.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끊임없는 자기 교육으로 자꾸만 새로와 질 때, 인간은 계속적으로 탄생의 기쁨을 맛보며 좀더 완전한 인간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교육의 도장(道場)으로 한 사회에서 중핵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인 것이다.

이 도서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병명은 영양 실조,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극히 궁핍한 상태에서 태어난 지 한 세기도 안된 이 ‘애늙은이’는 음지에서 누렇게 뜯 채 자꾸자꾸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